

홈플러스 회생 논의서 고성 오간 MBK·메리츠 '책임 공방'

17일까지 2000억 미확보시 파산
민주 을지로위 "서로 조건만 내세워"
국민연금에 MBK 투자금 회수 요구

"1000억원이라도 빨리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최대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 경영진이 홈플러스 회생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고성(高聲)이 터져 나왔다. 고성의 주인공은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다. 민 위원장에 따르면 MBK 측은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메리츠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2000억원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해야 감병주 MBK 회장의 개인보증서를 제출하겠다고 새 조건을 걸었다.

회생 절차가 폐지된 홈플러스는 오는 17일까지 운영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파산이 불가피하다. 메리츠 측은 감병주 MBK 회장이 보증한다는 조건으로 긴급운영자금(DIP) 1000억원을 에스프로 계좌에 예치해 둔 상태인데, MBK 측이 돌연 메리츠 측에 2000억원의 대출을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메리츠의 에스프로 예치 운영자금 1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간담회'를 열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왼쪽에서 4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1000억원을 마련할 방안을 이 자리에서 강구해보려고 했으나, 두 기업 서로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하면서 회의 분위기는 경색됐다. 또한 메리츠는 에스프로 예치 자산 1000억원의 집행 조건을 법무법인, 회계법인, 이사회 검토 후 배임의 소지가 없을 경우로 한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MBK와 메리츠가 홈플러스 회생을 막기 위해 곳곳이 '지뢰'를 심어놓은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메리츠는 홈플러스의 제1채권자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지금까지 회생에 대해서 무엇을 했냐고 물어볼 때 관련한 이자 받는 것을 유예했다고 한다"며 "그건 법적으로 유예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메리츠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단 1원도 투입한 바 없다. 나중에 청산 후 이자 감면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감면한다는 것도 아니고 전부 안 받았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메리츠는 돈을 빌려주고 담보권을 설정했는데, 그 담보권이 충분해보이는데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대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러면서 긴급운영자금대출(DIP)도 안 한다고 한다. 메리츠로서는 100% 본인들에 안전한 방법만 한다고 보면 된다. 담보 여력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손해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

인적인 의견으로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온 '가짜 엄마, 진짜 엄마' 이야기를 예로 들고 싶다"며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에 대해서 가짜 엄마는 아이를 죽더라도 쫓겨가고 하는데, 진짜 엄마는 죽으면 안 되지 하고 가져가려고 한다. 두 집단(MBK와 메리츠)은 10만 민생과 관련해서 가짜 엄마"라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서 여당 단독으로도 홈플러스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을지로위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MBK 투자금 회수, 위탁 운용사 자격 관리 강화 등에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민 위원장은 "국민연금 기금 위탁 운용사 선정 및 관리 기

준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간 경과 이상의 제재를 받은 위탁 운용사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MBK가 홈플러스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직무정지란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민연금은 MBK가 운영하는 11개 사모펀드에 약 2조5000억원을 출자하고, 일부는 회수됐지만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여전히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운용사의 운용 적정성과 책임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MBK의 반복된 악질적 금융행태와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논란을 고려할 때 기존 투자자 회수 문제와 위탁 운용사 자격 유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 청산이 현실화되면 노동자, 입점업체, 납품업체, 전단체 피해자들의 피해는 볼보듯 뻣뻣하다. 홈플러스는 6월분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며 이는 332억원 규모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metro

민주당 전당대회 룰 확정 난항... 계파 갈등 재점화

선호투표제·순회경선 신경전
친청계, 결선투표제 도입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지도부 선출 규칙을 조율 중인 가운데, 당 대표 선출 방식과 순회 경선 일정을 두고 각 후보 간 입장이 팽팽해 확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전준위)는 9일 국회에서 전준위 회의를 열고 당 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를 재논의했다.

이연희 전준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전준위나 기획분과 입장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다. 친청계(친정청대)인 이성운·문정복 최고위원은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선호투표 도입에 반대했는데, 이 의원은 "오늘 전준위 기획분과에서 관련한 사항에 대해 보고했고, 전준위 내에서는 당헌·당규 위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 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날 열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전체회의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시스

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 대표 선출 방식은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선호투표제는 3인 이상의 후보가 출마하는 선거에서 대표를 선출할 때,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를 제

외하고 최하위 득표자가 받은 2순위 표를 남은 후보들에게 가산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과 거리가 가까운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이 최하위 득표자가 되면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도 친명(친이재명)계 후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정청대 전 대표 입장에서 불리한 투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 전 대표 측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가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는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선호투표를 두고 "이미 11차 당무위 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김 전 총리는 "문제없는 룰을 자주 시비 거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집단적 자기정치"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에 "선호투표는 투표를 한 번만 해도 되니까

비용이나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라며 "친청계는 1차투표와 결선투표 사이에 쟁점화를 시켜서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순회 경선 일정으로도 양측은 대립하고 있다. 전준위는 민주당 순회 경선 시작과 끝이 정청대 전 대표의 고향인 '충청'에서 치러지도록 설계했는데 김 전 총리 측에서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전남 순천을 찾아 기자들에게 "순회경선 순서도 대전에서 시작해 대전에서 끝나는 게, 대전 연고인 직전 대표가 출마하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문제는 제기"라며 "통상적으로, 우리 정당사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런 게 깨졌다고 해서, 불리하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할 생각도 없고 룰을 바꾸려 하거나 시비하지 않겠다. 돌파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李, 몽골서 정상외교 리튬·희토류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8일 오후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해 정상 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군 1호기를 타고 몽골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은 15년만이다. 이 대통령은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파메'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몽골은 한국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동반자인 동시에, 북한과도 오랜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매우 특별한 나라"라며 "이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주요국들과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해 온 몽골의 외교적 자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몽골 국빈 방문을 두고 "한-몽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몽골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1990년 수교 이래 36년간 변함없는 신뢰를 쌓아온 가까운 파트너"라며 "몽골인들에게 '황금(黃金)'이라는 말은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인 만큼 양국의 황금시대도 양국 국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새로운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몽골 국빈 방문 중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해 양국 신뢰를 증진하고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박태홍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안 두고 여야 충돌

국힘, 장윤기 사건 등 사례 들며 총공세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속도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소식에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

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없는 세상에서 구제 못 받는 피해자들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살인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증거를 없앴다. 수사팀장은 그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

주고 앞장서서 사건을 축소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을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대변인단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보완수사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가해자가 경찰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하고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국민이 국가를 믿게 하는 마지막 버팀목인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흔들린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검찰에 대한 복수심도, 강성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선동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기존 계획대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형사소송법TF는 국회 의안과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날(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2건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한 뒤 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TF가 발의한 안은 이미 상정된 안과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으로 성안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